한일관계 복원 시동…장기중단 협의 채널 재가동 추진

외교차관급 전략대화·안보협의회 등 윤 대통령 방일 이후 본격화 할 듯
수출규제 해제 맞춰 지소미아 논의 일본 호응·국내 여론이 속도전 관건

한일 정부가 한일관계를 전면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한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한일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수년간 중단됐던 한일 간의 각종 전략적 협의 채널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방일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토대가 될 전망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정부 해법이 발표된 전날 윤 대통령의 16~17일 방일 가능성을 잇달아 보도하는 등 조기 방일이 실현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 방일을 통한 한일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관계 복원 비전이 제시되면 그간 중단됐던 여러 협의 채널의 재가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가 우선 꼽힌다. 단순한 현안 협의를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 및 범세계 이슈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시작된 채널로 2014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후에는 한일 외교차관이 양자 회담을 하더라도 전략대화 형식으로는 열리지 못했다.

한일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외교안보 대화체인 안보정책협의회도 1998년 시작돼 꾸준히 개최됐지만 2018년 3월 이후에는 열리지 않았다.

이런 협의체가 중단됐던 것은 결국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 이후 과거사 갈등이 악화하면서 한일 간의 '전략적 신뢰'가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발표해 문제를 풀기로 한 만큼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그동안 경색됐던 부분을 복원·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외교,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기간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제징용 갈등에서 파생됐던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도 해결 수순으로 갈 전망이다.

일본은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시점과 사실상 동시에 한국 정부도 지소미아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처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한일 통상당국이 양자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019년 당시 일본 정부에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에 국내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이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속도전'이 얼마나 국내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일 협력이 국익 확대에 부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여론의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상반기 중 기시다·바이든과 연쇄 정상회담 전망

이달 16~17일 방일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올 상반기에 미국, 일본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전날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먼저 발표하고, 일본도 호응하면서 4년 만의 대통령 방일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16~17일 방일 가능성을 보도했다.

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서 거론되던 방일 시점(이달 하순)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일정이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음 달 하순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돼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시기, 형식, 의제 등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크다.

G7 회원국이 아닌 한국은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달 방일 이후 G7 정상회의까지 참석하면 2개월 만에 다시 일본을 찾는 셈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원구성 지연땐 국회의원 수당 중단 법안 발의

민주 정개특위 간사 전재수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7일 원(院) 구성 시기마다 발생해 온 국회 공전을 막기 위한 '국회법' 및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단 선출이 기존에 법적으로 명시된 기한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 절차와 기간을 설정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역시 교섭단체 간 협상이 아니라 소속 의원 수 비례를 통한 '시스템 분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기한 내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을 넘긴 날수만큼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전 의원은 "국회가 개점 휴업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편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정치 불신을 종식하는 책임정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日에 구속력 없는 '각자발표' 논란…2015년 위안부 합의와도 달라

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

지난 6일 공개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한일 간 협상을 통한 합의가 아니라 한일 정부가 각자의 조치 및 입장을 발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해법 발표를 "우리 주도의 해결책"이라고 표현했다.

일본으로부터는 '포괄적 사죄와 자발적 기여'란 호응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일본에 구속력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2015년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와도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이는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성격 차이 등에서 비롯한 피치 못할 한계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해법 발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계획을 밝히는 방식이었다.

뒤이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국 외교장관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환영 성명에서 '두 개의 역사적인 외교장관 발표'(two historic foreign ministerial statements)라고 표현한 데서도 드러난다.

일본 기업의 재단 기여 가능성 등은 아직 열려있지만 기약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일본 기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본측의 자발적 기여를 환영한다"고만 말했다.

피고기업이 아닌 일반 일본 기업들이 재단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라 한국의 해법 이행 과정을 어느 정도 지켜본 결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당시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서 합의를 타결하고 공동기자회견으로 발표를 내놨다.

/연합뉴스